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 미래창조과학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5. 12. 7(월)	
		작 성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김영문 / 사무관 이상미 (Tel. 044-200-2213)	문 의	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과장 박윤규 / 사무관 윤두희 (Tel. 02-2110-2822)
12.7(월) 11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석간신문 사용 가능 미래부도 해당기자단에 동일한 보도자료 배포					

정부, 미래 먹거리 「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」 확정!

-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, '사물인터넷 확산 전략' 등 5개 안건 의결
- 황 총리, "모든 규제 다 푼다는 각오로 신산업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"

- ▶ 사물인터넷 확산 : '17년까지 2,500억원 투자, '20년까지 42만명 고용유발 효과
- ▶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: '20년까지 세계시장 30% 점유, 연 5.6조 매출과 3만명 고용유발
- ▶ 유료방송 기술규제 새롭게 재편, 클라우드컴퓨팅 및 네트워크 발전전략 추진

□ 정부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'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*'를 개최하고,

- ▲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▲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▲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▲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▲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정보통신전략위원회 : '14.5월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황교안 국무총리(위원장), 최양희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,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

- 이번 회의는 사물인터넷, 무선충전, 융합방송과 같은 ICT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과 클라우드,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되었다.
- (사물인터넷 확산 전략)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(IoT)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‘사물인터넷 확산 전략’을 심의·확정하였다.
 - 동 계획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,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 - 우선, 제조, 헬스/의료, 에너지, 홈, 자동차/교통, 도시/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‘17년까지 총 1,300억원을 투자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.
 -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‘사물인터넷 추진단’을 구성하여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, IoT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.
 - 또한,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,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,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·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.
 - 이를 통해, ‘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, 부가가치유발 13조원,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해결,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대효과도 예상된다.
- (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) 정부는 모바일기기, 가전,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‘무선전력전송(무선충전) 활성화 방안’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○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향후 연평균 60%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*되는 신산업으로, 이번 방안의 수립은 무선전력전송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* 세계시장 규모는 '15년 16억불→'20년 170억불로 성장 전망(Markets&Markets)

○ 동 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'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,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

* 기술수준 '14년 82.5%→'20년 100%, 세계시장 점유율 '14년 6%→'20년 30%

- 도서관,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충전인프라 보급방안을 마련하고('Model City', 17년~),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,

- 국제표준화 선제적 대응 및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를 통해, '20년 목표인 세계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30%를 점유할 경우 연 5.6조원의 매출과 약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.

□ (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)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'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'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○ 우선 케이블/IPTV/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하여, 전송망·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(위성+IPTV)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, 동일 서비스·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특정 기술표준 이용을 강제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 자율적인 기술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한다.

- 케이블 방송의 유선망 내 주파수 이용 제한과 송출설비 관리규제도 완화한다.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대역 주파수 대역을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, 설비변경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 - 동 방안의 시행으로, 방송사업자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가 촉진되어 혁신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.
- (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) 또한,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'제1차 K-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'을 심의·확정하였다.
-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」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('16~'18년)이며,
 - 공공부문에서 3년간 4.6조원(공공 1.2조원)의 시장을 창출하고 '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% 이상으로 제고하여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한다.
 - 이를 위해, 정부통합전산센터(1·2센터)의 클라우드 전환,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지침·보안인증제 마련,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,
 -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(표준계약서 등) 마련,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, 금융·의료부문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·개선한다.
 - 한편, 전략적 R&D 투자 확대,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- (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) 마지막으로,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,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'네트워크 발전전략'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- 동 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(1Gbps급)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,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* 구축을 목표로 한다.

* 전국 어디서나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고 유무선 기가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

- 우선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유·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(Back-bone)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, 이와 더불어 대·중소도시 등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.
- 또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소주기 지원 체계 구축, 네트워크 장비 대·중소 기업간 협력,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.

- 이를 통해 향후 5년간('16~'20)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하는 총 생산 유발액은 약 81조원,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원,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.6만명으로 추정된다.

□ 황교안 총리는 “정부에서는 그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·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”라고 언급하며,

- 참석한 정부위원들에게도 “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“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·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첨부 :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요안건

[1호] K-ICT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(안)

(안건담당 : 미래창조과학부 정재훈 사무관 02-2110-2841)

1. 추진배경

- 모바일(Mobile) 인터넷의 확산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이 진행 중으로, 사물인터넷(IoT), 클라우드(Cloud), 빅데이터(Bigdata)가 연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CBM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
- 전 세계는 Io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, 국가현안 해결, 공공부문 효율화 및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 중
 - * IoT가 창출하는 경제효과 : 10년간('13~22년) 19조불(공공 4.6조불, 민간 14.4조불)(Cisco, '13년)
- 국내에서도 Io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('15년~)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본격 확산은 아직 미진
- 이에, 「사물인터넷 기본계획」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필요

2.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

- ① IoT 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사업화를 지원
- ② IoT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·활용 비용을 낮춤
- ③ IoT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 기반 강화

1] 6대 전략분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집중 지원(1,318억원)

- 성장성과 IoT 활용 준비도가 높은 6대 전략분야에 대해 실증사업 확대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집중 지원, 성과 조기 창출

- 성장성과 IoT 활용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기술개발, 시범테스트, 시장 분석 등 IoT 활용 가능성을 확대

② Io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기 개발/활용 비용 감소 추진(574억원)

- 스마트 센서 핵심 공정 기술, 회로분야 설계·공정 기술 및 정보 처리, 통신 등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지원
- IoT 실증단지(부산 스마트시티)에 소규모 IoT 전용네트워크를 시범 구축,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국 확산
- 국제 사실 표준(oneM2M) 기반의 공통 플랫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, 타 플랫폼과의 연동, 빅데이터 연동 등 기능 고도화를 추진
- 플랫폼, 네트워크 등 표준화 분야의 국제 공적/사실 표준화 기구 적극 대응 및 국내 표준화를 지속 추진

③ IoT 활용 확산 공통 기반 강화(628억원)

- IoT 제품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, 경량·저전력 암호 기술, 보안 컨트롤러 칩, 보안 운영체제 등 보안 기술 개발 추진
- IoT를 통해 수집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
- 스타트업 육성 및 국내 IoT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「IoT 혁신센터」, IoT 제품·서비스 통합 테스트를 위한 「IoT 오픈랩」 등 지원 인프라 기능 강화

3. 기대효과

- '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, 부가가치유발 13조원,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IoT를 활용한 사회현안해결,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대효과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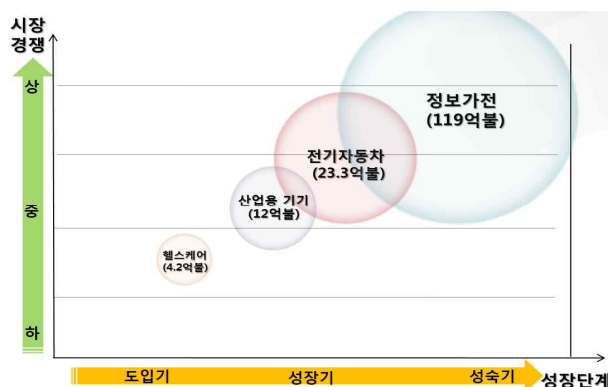
[2호] K-ICT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(안)

(안건담당 : 미래창조과학부 정건영 사무관 02-2110-284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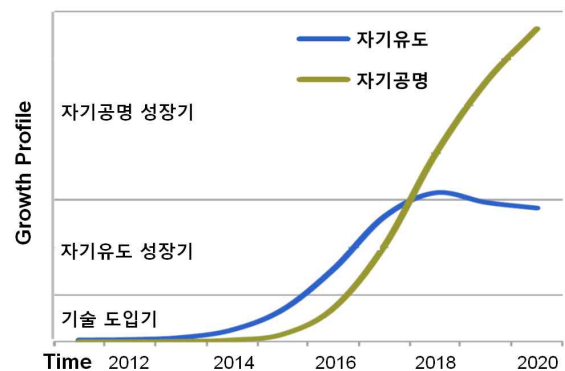
1. 추진 배경

- 무선전력전송은 전기·전자제품의 확산에 따라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는 미래 유망기술
 - ※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'13년 세계경제포럼 선정 미래 10대 기술에 포함
-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 IoT, 웨어러블 기기, 가전, 전기자동차, 산업·의료용 기기 등에 활용이 확대될 전망
- 아직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

< 분야별 시장 전망 >



< 기술방식별 발전 전망 >



2.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

- ◇ 무선전력전송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, 기술주도권 강화, 국제표준 선도,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 추진

1]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

- 초기 시장 확보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시범 인프라 구축 ('Model City') 및 민간표준 단체의 시범사업 국내 유치 추진

-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적기 공급하고 글로벌 주파수 분배와 조화를 위해 국제기구(ITU) 활동 강화
- 시장 맞춤형 정책 발굴과 민관협업을 위해 산업계·연구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'무선전력전송 민관협의체'를 구성·운영

②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

- 중소·중견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고효율 급속 무선충전 핵심기술 개발 추진
- 다양한 응용분야(IoT, 웨어러블 기기 등)로의 확장을 위해 공간개념의 무선전력전송기술과 기기간의 에너지 전송기술 개발

③ 국제표준화 선도

- 글로벌 수준의 통합 테스트베드를 구축·운영하여 무선전력전송 제품 국제 인증과 기술개발을 지원
-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화 컨설턴트를 운영하고,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④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

- 무선전력전송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,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
- 중소기업 무선전력전송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저감 기술 및 컨설팅 추진

3. 기대효과

-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화로 전파응용 신산업·신시장을 창출하고,
- 세계 무선전력전송 시장의 30% 점유(20년 목표)시, 연 5.6조원의 매출 및 약 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기대

[3호]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(안)

(안전담당 : 미래창조과학부 강창목 사무관 02-2110-1893)

1. 추진배경

- 유료방송 시장 정체 극복, 新융합기술 도입·투자 확대 기반 마련
-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틀의 혁신적 재구성
→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효과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모델로 수행

2. 현황 및 문제점

20년 前 케이블사업자가 독점으로 영업하던 시기에, 방송품질의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던 엄격한 정부 주관 관리체계가, 사업자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시설관리가 간편한 디지털 방송이 보편화된 현재까지 지속

- (칸막이식 허가) 케이블 / IPTV / 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허가체계는 융합형 유료방송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한 구조
※ 위성방송(skylife)을 접시 없이 볼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허가 법령 기준이 없어 위법 판단('12.8월)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



- (기술선택 제한)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기술표준과 유선주파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의 혁신적·자율적 기술 도입을 제한
- (설비 관리규제) 경미한 설비의 변경시에도 시설변경허가와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설비 도입 어려움 등 사업자 경쟁력 저하 초래
※ 미래부 심사(서면) 30일, 방통위 사전동의 30일, 전파관리소 준공검사 30일 소요

3.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

- ◇ 방송기술선택과 설비관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
- ◇ 미디어 산업 혁신과 새로운 시장·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

1] 사업허가의 기술중립화

- (융합형 전송 도입) 단기적으로는 DCS(접시없는 위성방송, 위성 + IPTV)와 같이 융합형 전송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
- (유료방송 규제 개선) 장기적으로는 동일서비스·동일규제 실현을 위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체계가 특정기술에 구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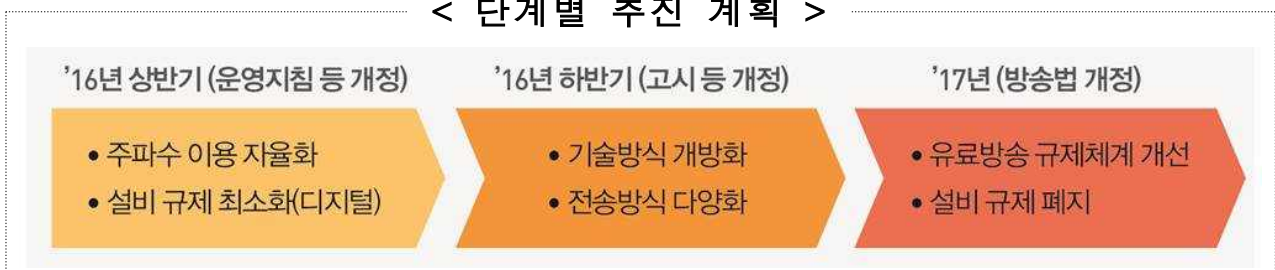
2] 방송기술 선택의 개방화

- (기술방식 개방화)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'특정 기술표준 지정' → '新기술의 도입 자율화'(적정 품질 보장)로 전환
- (주파수 자율화) 유선망의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를 배분·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

3] 방송설비 관리의 자율화

- (송출설비 관리규제) 신속한 설비변경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성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 허가·검사 규제 최소화
 - ※ 기술기준과 무관한 디지털방송 설비·채널 교체의 경우 변경허가·검사 없이 사업자 자체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, 장기적으로 시설변경허가 및 검사 규제 폐지 검토
- (선로설비 관리규제)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모두 제공하는 전송 선로설비의 방송 - 통신 측면의 관리규제를 일원화

< 단계별 추진 계획 >



[4호] 제1차 K-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(2016~2018)

(안건담당 : 미래창조과학부 남형욱 사무관 02-2110-1845)

1. 추진 배경

-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절감, 업무혁신 등을 통해 국가·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ICT 인프라로서, 세계적으로 확산 중
 - * 미국기업의 약 40%('12년), 일본기업의 약 33%('13년)가 클라우드를 도입
-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」 시행(9.28)을 계기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클라우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마련이 긴급

< 클라우드컴퓨팅 개념 >

- ▶ ICT자원을 직접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ICT인프라
 - * 종류 : SaaS(오피스 등 SW), PaaS(SW개발 플랫폼), IaaS(서버 등 인프라)

2. 중점 추진과제



1 공공부문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 (목표: '18년까지, 공공 이용률 40%)

- 정부통합전산센터(1·2센터)에 운영 중인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(G-Cloud)로 전환('18년)하여 업무환경을 혁신
 - 이와 함께, 클라우드 기반의 제3센터 구축 추진('15.11월 예타 통과)
 -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지침, 보안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('15년, 행자부·미래부 등), 이용확대 추진('16년~)
 - 이와 함께, 클라우드 공공발주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갖추고, 선도 프로젝트*를 실시('16년~)하여 클라우드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공
- * (예) (클라우드 기반) 초·중·고 SW교육, 국가학술정보관리, 국가지자체 대형이벤트 운영 등

②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 (목표: 민간 이용률 30%)

-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보안우려 해소를 위해, **이용자 보호장치** (표준계약서 등), **침해사고 예방·대응체계** 등을 미리 구축('15년~)
 - * '15. 9. 9일 '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' 발표(경제관계장관회의)
- 금융·의료 등 ICT 활용부문에서 **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·관행** 등을 **발굴·개선**하여 클라우드 이용확산 기반 마련
 -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'**민간 규제개선 추진단**'을 운영('15.8월~)하여 사례를 **발굴**(~15년)하고, **법령 개정** 등 개선조치('16년~)
- 이를 토대로, **중소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가 활성화**될 수 있는 **지원방안**(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사업 등) 강구

③ 클라우드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(목표: 클라우드 전문기업 800개)

- 전략적 R&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(SW R&D 중, '15년 9% → '18년 20%), ITRC,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**클라우드 기술리더 집중양성**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**클라우드 혁신센터**를 중심(Hub)으로 **원스톱 지원체계**를 구축하고, **국내·해외기업 간 협력**(파트너십 프로그램)을 강화하여, **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촉진**
 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개발 및 전략적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
- 아울러, 클라우드서비스의 핵심인프라인 **데이터센터산업** 육성을 위해 **에너지 규제** 등을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**개선**('16년~)

3. 기대효과

- **클라우드 이용률 증가**('13년 3.3% → '18년 30%), **클라우드 시장규모 성장** ('14년 5천억 → '18년 2조원) 등 **산업성장의 모멘텀**을 제공하고, **공공부문 예산도 절감**(향후 3년간 약 3,700억원)

[5호] K-ICT 네트워크 발전전략(안)

(안전담당 : 미래창조과학부 유시형 수석 02-2110-2509)

1. 추진배경

-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정책*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,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** 확보
 - * 초고속정보통신망 전략('95~'05년) → 광대역통합망(BcN) 전략('04~'10년) → 광대역융합망(UBcN) 전략('09~'14년)
 - ** 광대역 인터넷 1위('15년, OECD), 인터넷 평균속도 1위('14년, Akamai) 달성
- 최근,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, 트래픽 수요 급증과 네트워크의 지능화·신뢰성 강화 요구 증가 등 네트워크 환경이 빠르게 변화
 -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*와 관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네트워크 비전과 전략 수립이 요구됨
 - * 국민의 안전·편리·풍요 욕구 증대, 인구·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초실감형미디어, ICBMs(IoT, 클라우드 빅데이터, 모바일) 등 新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

2. 중점 추진과제

- ◇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 혁신을 선도
- ◇ 초연결망 구축을 위한 민간·정부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



① (더 빠른 네트워크)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

- 기가급 무선 및 최대 10기가급 유선 가입자망, 기간망 고도화 추진
 - ※ '20년까지 5G(1Gbps급)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최초 상용화 및 '17년부터 최대 10Gbps급 유선 인터넷 제공 시작
- 지역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및 민간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 촉진
 - ※ 취약지역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기가인터넷 커버리지('20년 95%) 지속 확대

② (더 혁신적인 네트워크)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

- 신기술 검증·활용 및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운영기술 확보
- 혁신적인 네트워크 신기술 공공분야 선도 적용

③ (더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)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 혁신 촉진

-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진입과 활용 지원
-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④ (더 경쟁력있는 네트워크 산업)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

-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쏠주기 지원체계 구축
- 대-중소 협력,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장비산업의 튼튼한 성장 기반 조성

3. 기대효과

- 미래 네트워크 선도 구축을 통한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로, '세계 최고의 ICT 超강국' 도약 및 '인터넷 융합 경제' 선도
 -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5년간('16~'20) 발생하는 총 생산유발액은 약 80.80조원,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4.74조원, 고용유발인원은 약 47.61만명으로 추산
 - ※ 한국은행 산업연관표('14년)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- 고도화된 네트워크 활용 홀로그램/UHD 기반 실감형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국민 행복 및 삶의 질 제고